

보도시점 2024. 2. 27.(화) 11:00
2. 28.(수) 조간

배포 2024. 2. 27.(화) 09:00

가공식품 물가 하향안정화 위해 지속 노력 중

- 식품업계·식품산업협회·농식품부 간 소통 강화로 가공식품 가격안정 도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가공식품 소비자물가가 2023년 2월을 정점으로 상승폭이 지속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 소비자 물가상승률(전년동월비, %): ('23.2) 4.7 → (7) 2.4 → (11) 3.3 → **(12) 3.2 → ('24.1) 2.8**

* 가공식품 물가상승률(전년동월비, %): ('23.2) 9.9 → (7) 6.6 → (11) 5.1 → **(12) 4.2 → ('24.1) 3.2**

농식품부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식품 및 유통업체 현장을 20회 방문하고, 장·차관 주재 식품업계 물가안정 간담회 개최(3회) 등을 통해 식품업계 원가부담 완화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업계에 물가안정 협조를 지속 요청해 왔다.

그간 식품업체가 제기한 총 11개 건의사항 중 9개 과제는 완료하였으며 2개 과제는 추진중에 있다. 먼저, 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해 달라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24년 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15개에서 27개로 대폭 확대하였다.

아울러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신규로 참여하는 유업체에 대해서도 가공유 사용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식품기업의 대미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기업이 케이-푸드(K-Food) 로고를 활용할 수 있도록 '23년말 미국에 케이-푸드(K-Food) 로고 상표권 등록을 완료하였다.

올해는 생산자-수요자와 협의를 통해 음용유·가공유로만 분류한 현재의 원유 용도를 아이스크림용, 치즈용, 분유용 등으로 더욱 세분화할 예정이며, 올리브유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업계 비용부담 완화 요청에 대해 관계부처와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인건비·에너지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식품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물가 상승률이 둔화세로 이어지고 있다. 다만, 최근 국제유가, 환율 및 원당* 등의 가격 반등에 따라 물가상승 요인은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 원당(\$/톤): ('22.10) 403 → **(23.11) 602(최고점)** → (12) 489 → ('24.1) 498 → **(2.22) 503**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서민 물가안정을 위해 업계 및 협회 등과 더욱 소통하며 식품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식품산업정책관실 푸드테크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영수 (044-201-2111)
		담당자	사무관	장성두 (044-201-2123)

